



2022년 5월호 KAIF 칼럼은 수산그룹 정석현 회장이 매일경제 오피니언 '매경춘추'에 2022년 3월 16일에 게재했던 '중대법,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을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제언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 정부가 시급히 개선할 일들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그중 하나다. 새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법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중대재해 사고가 많았다. 2018년 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노동계의 간절한 호소가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안전관리 업무가 기업의 최우선적 업무라는 경각심을 심어준 것은 큰 성과다. 그런데도 왜 이 법은 노동계와 기업 모두의 불만이 클까? 법이 불합리하고 애매해 쉽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처벌 강화에만 중점을 두고 예방대책과 보상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1) 예방에 치중하고 2)보상을 충분히 하고 3)처벌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첫째, 사고는 철저한 예방으로만 줄일 수 있다.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는 쉽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사고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부의 엘리트 관료들이 이 분야에 근무해야 한다. 기업과 작업자의 필수 의무를 산업별·규모별로 구체화하자. 도로교통법이 도로별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무

가 명확하고 규정이 다르듯이 안전관리제도도 산업별·규모별로 특성에 맞게 규정이 달라야 한다. 합리적인 좋은 예이니 벤치마킹하자. 안전설비전문기업 면허를 신설해 육성하고, 장기 경력 퇴직자들에게 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분들을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국비로 파견해서 위반 기업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권한을, 위반 작업자에게는 퇴소를 명령하는 권한을 주자.

둘째, 사망사고의 산재보상금을 교통사고 보상금보다 더 높게 보상하자. 사망사고 시 유족과 사용자는 보상을 놓고 극도의 갈등을 겪게 된다. 산재보험 보상이 과소하기 때문이다. 보상금액 증가는 산재보험료를 올려서 해결하자. 사고가 본인 과실일 경우 제3기관의 판단으로 보상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그래야만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더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것도 국가기관의 중요한 의무다.

셋째, 기업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책임을 따져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최고경영자를 하한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 최고경영자에게는 안전관리도 중요한 업무이나 총괄 경영책임은 더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의 공백은 치명적이다. 과학적인 투자와 안전수칙 준수가 재해를 예방한다.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처벌에 차이를 두자. 그래야 안전관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작업자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무재해는 정부, 기업, 작업자 각자가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만 지켜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명료하고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빨리 개정해야 한다. **KAIF**